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송기도

석패율제와 꼼수정치

지난 17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석패율제는 각 당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할 때 지역구와 동시 출마한 중복 입후보자로 명단을 작성하여 이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것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주는 방안이다. 호남에서도 한나라당 의원이, 영남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그런데 정말 이 석패율제가 지역주의 완화와 한국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까? 지금도 각 정당들은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취약지역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호남 출신을, 그리고 민주당도 영남 출신을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시키고 있다.

원래 석패율제는 2000년 16대 총선 때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제안했었으나, 당시 한나라당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었다. 한나라당은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영남지역 기반을 잠식당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석패율제를 강력히 반대했었다.

그런데 이제 10여년의 세월이 흘러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강원도지사가 한나라당 후보가 아니어도 당선되고, 민주노동당이 영호남에서 선전하는 상황이 됐다. 다시 말해 아직까지도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 완화된 시점에서 한나라당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했고, 민주통합당도 진보정당과 아무런 논의없이 한나라당의 손을 덥석 잡았다.

대부분의 정치 선진국들은 석패율제가 갖고 있는 비민주성 때문에 이를 외면하고 있고, 독일과 일본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선거제도이다. 정당명부비례제를 택하고 있는 독일은 정당에 대한 투표가 중심이고, 지역구 선거는 보조적이다. 유권자는 당의 정강과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석패율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과거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이 당선됐던 대선거구제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서 당의 중진들이 살아남기 위해 채택한 것이 석패율제이다. 일본에서조차 '계파정치의 산물'로 비판 받으며, 구시대적 족벌정치를 더욱 강화시켜준 것이 일본의 석패율제이다.

지역주의를 완화시키기 위한다는 명분의 석패율제는 첫째, 유권자에 의해 심판받고 낙선한 정치인을 다시 당선시킴으로서 대의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유권자의 정당한 선택을 왜곡시킨다.

둘째, 궁극적으로 신진정치인의 진출을 막고 유력 정치인들의 당선을 보장해주는 보험용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셋째, 영호남지역의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비례대표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규범적 당위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새로운 각오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혁신과 개혁을 강조하며 출범한 민주통합당은 왜 구태의연한 방식의 정치에 동의했을까? 민주통합당 중진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한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지역구도를 넘기 위한 선거제도로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 최선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차선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차악은 석패율제, 최악은 현행대로 순 아닐까요?"라고 트위터에 올렸다. 국회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중선거제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차악으로 석패율제라도 해야한다는 궁색한 변명이다.

왜 4월 총선 이후에 구성될 제 19대 국회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려하지 않는가. 왜 쫓기듯이 선거를 눈앞에 두고 법을 바꿔야 하는가. 이는 마치 시합을 앞두고 게임룰을 바꾸는거나 다름없다. 그런 이상한 게임이 유권자에게 감동을 주리라 생각하는가.

지난 수십년간 한국 정치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지역주의 정치를 해소하기 위한 올바른 개혁이 몇 개월 늦어지면 어떤가. 개혁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진정성이나 감동이 느껴지지 않고 왠지 '꼼수'처럼 느껴진다. 나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

〈전북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칼럼

개선해야 할 성 보건 정책

허정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60년 동안 사회 모든 분야에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다. 6·25전쟁이라는 역사상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참변을 겪었고, 국민 소득수준은 채 80달러도 되지 않는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다. 조선시대의 봉건 사회 제도 및 의식이 뿌리깊어 국가의 장래가 암울하기도 했다.

그 뒤 60년대 이후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10월 유신, 10·26사태, 광주민주화 운동 등을 거치면서 정치적 민주화 및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신장시키는데 큰 발전을 했다. 이어 70년대 오일쇼크 경제위기, 97년 사상초유의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도 잘 극복해 국민소득 2만 달러,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다.

세계 역사상 원조를 받는 피원조국에서 세계 각국에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발전한 것은 오로지 우리가 유일하다고 한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동반돼 따라가야 할 우리들의 의식이 뒤따르지 못한 부분도 있다. 특히 성교육 및 사후관리 문제에서 그러하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엄격한 성리학 사상 밑에서 성에 대한 거론과 교육이 억제되고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엄격한 규제의 틀에 묶여 있었는데, 개방의 결과로 현재는 엄청난 문제가 내재되어 있으면서도 전향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성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상황과 실체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특히 성 개방의 영향으로 미혼 여성들의 규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는 성생활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의학적 견지에서 볼 때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는 성병의 만연 및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인한 문제를 우리는 더 이상 미루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자유분방한 성관계로 인해 성병을 겪음으로써 이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고 있다. 성병에 의해 골반염이 생기는데 이것은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약간의 불편함 정도의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모르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자궁외 임신, 불임, 만성 골반통으로 연결된다.

진료 현장에서 미성년자들의 예기치 않는 임신이 만삭이 되도록 본인이나 그 산모의 어머니도 몰랐던 경우를 가끔 접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식 보건정책은 15년 전까지는 가족계획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산아제한 정책뿐이었으며,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적 심각성으로 인해 오로지 저출산 대책에만 몰입하고 있다.

미성년자인 어린 학생들의 임신과 미혼모의 사회적 심각성을 아무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인공 임신중절 문제도 현재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다. 40년 전에 만들어진 엄격한 모자보건법 때문에 무뇌아, 염색체 이상 등 태아에게 치명적인 질환이 있어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보건 정책에 있어서, 젊은 세대 성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성교육과 임신에 대한 상담, 부득이한 경우 임신 초기의 임신 중절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빨리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들의 미성숙한 성문제와 그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발상의 전환이 있기를 바란다. 〈에덴병원 원장〉

은펜칼럼

호남 유권자들의 변화 욕구

최영태

올해는 선거의 해이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올해처럼 한 해에 동시에 치러지는 경우는 20년에 한 번 씩 발생하니 정치권이나 국민 모두 올해 한해의 선거 결과에 거는 기대와 설렘이 어느 정도일지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광주에서는 수년 전부터 매년 설 다음날 YMCA 강당에서 시민사회 인사들이 모여 합동세배를 하고 덕담을 주고받으며 시민사회 전체의 소망을 기원해 왔다. 올해 시민사회가 합동 세배 장소에 내건 표어는 선거의 해답게 '정권교체', '정치개혁', 'Change 광주'였다. 합동세배 장소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성향으로 볼 때 정권교체의 표어가 등장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4년 동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남북관계가 후퇴한데다가 극심한 지역차별까지 이루어진데 대해 많이 분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합동세배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단순히 정권교체만을 열망하지 않았다.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 역시 무척 컸다. 몇 사람만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선거가 되고 정치가 되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었다. 야권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 정당이 민주당이고 지금까지 호남이 민주당의 주요 거점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 지역에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은 곧 민주당에 대한 불신의 정도도 그만큼 높다는 것도 의미한다.

세 번째 표어 'Change 광주'에는 호남지역, 더 좁게는 광주·전남지역 정치인들을 대대적으로 교체하여 정치권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결과로 호남을 변화시켜야 하는 열망이 담겨져 있다. 의정활동을 잘하는 누구누구는 그래도 계속 키워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온건한 성향의 사람들이다. 상당수의 사람은 현역 국회의원 모두를 바꾸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펼친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의 발전 속도는 세계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빛났다. 경제발달과 정치 발달 양면에서 이런 성공적 사례를 만든 국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이 자랑스러운 역사, 특히 정치발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호남인들의 역할은 매우 컸다.

그러나 이 자랑스러운 역사 속에서도 정말 어둡고, 미래 역시 긍정적 전망보다는 비관적 전망을 하게 만드는 분야가 있다. 지방문제가 그것이다. 지방의 피폐, 그 중에서도 특히 호남의 피폐는 한국 사회의 다른 발전적인 모습과는 정 반대로 진행되었다. 이 어두운 역사에서 이 지역 정치인들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역균형발전은 이 시대 이 지역 정치인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중 하나이다. 비수도권 지역 정치인들, 특히 호남에 토대를 둔 정치인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유념해야 한다.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어려움과 한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사실 그들은 민주당이 집권당이었던 시절에도 지역민들을 감동시킬 만큼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설 다음날 이 지역의 시민사회가 외친 'Change 광주'라는 구호 속에는 이 지역을 위해 헌신할 정치인들의 출현에 대한 열망도 함께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선거에는 이성적인 것보다 감성적인 요소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시민사회는 '무조건 교체'라는 감성적인 구호보다는 의정활동을 기준으로 한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해 변화를 유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 이것은 호남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추구했던 가치이자 목표였기 때문이다. 〈전남대 교수·역사학〉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공병 방치…또 다른 질병 전파 걱정된다

농촌에서 폐비닐과 농약 병이 마구 버려져 거기에 신경 쓰고 있는 사이 축산농가에서 쓰고 남은 동물용 의약품 공병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약간 우려스럽다.

작년 여름 장마때 우리 고향 마을 하천에 적잖은 숫자의 양돈장 의약품 공병이 떠내려 왔었다. 버려진 축산 동물용 의약품 병들이 냇물을 따라 떠내려 가다가 수초 등에 걸려 허옇게 떠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버려진 의약품 공병 속에 남아있는 약의 성분들이 하천이나 토양에 들어가서 좋을 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버려지지 않고 그 안에서 부패하고 썩는 것 역시 좋지 않을 것이다. 이미 약 성분이 비를 통해 땅속으로 스며들어 토양 오염, 지하수 등 식수 오염과 함께 가축에게 또 다른 감염성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필자가 알기에는 현재 농약 병이나 폐비닐은 그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일정부분 돈을 대고 수거에 참여 하는 걸로 안다. 그렇다면, 이 동물용 의약품 공병이 제대로 수거가 안 돼 버려지는 문제는 동물용 의약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업체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그 공병을 사용하는 축산농가, 재활용업체(폐기물, 공병수거업체)도 서로 공병 처리를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한, 요즘은 구제역이나 각종 질병 때문에 농장 주인들은 어디 외출도 자유롭게 하기가 힘들고 불안하기만 하다. 그러니 판매업체나 수거업체에서 공병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 지금 판매업체에서는 수거 의무가 없다며 버티고 있으니 농민들만 애간장을 태우는 실정이다.

여러 가지를 모두 고려해 봤을 때 동물용 의약품 공병 수거는 제조 판매회사가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정부는 이와 함께 재활용 업체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밑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다. 다른 물건과 달리 축산농가들은 시골에 있으므로 재활용 업체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 시골까지 가기를 꺼릴 것이다. 그러니 이런 업체들에게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동차 기름값 등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노은영·목포시 석현동

사설

'시한폭탄' 카드빚 급증 더 이상 방치 안 된다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한다. 금융당국의 과열경쟁 억제책에도 지난해 카드사와 할부금융사의 가계대출이 은행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의 가계대출은 38조2천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때와 비슷한 규모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4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가계대출이 2010년 이후 10~14%대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면서 연체율도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카드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10월 평균 1.8%로 4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 0.7%에 비하면 무려 2.5배에 달한다.

카드사와 할부금융 이용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 고금리를 주고라도 돈을 빌리려는 서민이 대부분이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 이들 취약계층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거나 원금 상환불능의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카드 빚을 쓰는 서민은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많다. 카드부실이 900조 원이 넘는 가계빚 대란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2003년 카드대란으로 신용불량자를 400만 명 가까이 양산하면서 금융대란을 경험한 바 있다. 카드업계에 수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계부실→금융부실→경제위기의 고리를 끊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대출경쟁을 실질적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충격요법은 피하되 가능한 모든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저소득층이 빚을 갚지 못해 대부업이나 사채로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출을 무조건 막기보다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다.

청년 실업자 울리는 인터넷 재택근무 사기

극심한 불황과 구직난을 악용한 인터넷 재택근무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업체는 취업 준비생을 상대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e메일 광고로 현혹,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재택 근무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취업정보 사이트 등에 '집에서 쉽게 돈을 버세요'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고수익 보장'이라는 허위광고를 통해 구직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급여명세까지 공개하며 재택 근무자를 유인하는 것은 물론 해당 업체 휴대폰을 구입하게 한 뒤 인터넷에 회사 홍보글을 올려 다른 회원을 가입시키면 실적에 따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꼬드기고 있다. 심지어 '하루 2~3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매달 300만 원 보장'이라는 구체적인 성과급 액수까지 제시하며 구직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 대부분은 다단계 판매사로 피해자들은 휴대폰 구입비와 거액의 상품 구입비를 날리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실감에 사기마저 당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이중고를 겪는 셈이다.

인터넷 재택 근무 사기는 쉽게 돈을 벌려는 당사자들에게 1차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는 취업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자 발버둥치는 실업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벼룩의 간을 내먹어도 유분수지 청년 실업자들의 취업 의지마저 꺾어버린다니 말이 되는가.

이런 낭패를 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가 신뢰할 만한 업체인지 꼼꼼히 따지는 등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취업 사이트나 공공기관 홈페이지 관리자도 피해자들이 사기성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당국에서도 허위광고를 엄벌하는 등 부도덕한 사기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칭찬의 효과

10년 전 캔 블랜차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국내 출간된 이후 칭찬의 효과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잘 한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일이 안 풀릴 때 더 격려하라'는 등의 삶에 보탬이 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칭찬을 하면 저절로 웃음이 피어나고 하는 일에도 의욕이 생기기 마련이며 자신이 가진 힘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다. 긍정적인 면은 강조하고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되, 잘못한 일엔 벌을 주지 말고 시간을 주는 게 범고래 샴이 가르쳐준 지혜였다.

하지만 칭찬의 역효과를 조명하는 이들도 있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평가가 필요할 때 칭찬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심리학자인 캐럴드웩 교수는 "자부심을 주기 위해 하는 칭찬은 역효과를 부른다"고 경고했다. 듣는 사람이 정말 잘난 줄 알게 돼 결과적으로 더 진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워싱턴 교육감을 지낸 미셸 리는 "미국에선 아이들을 기분좋게 해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다"며 이 때문에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실력을 키우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어른에게 하는 칭찬을 좋은 말로 덕담, 내면을 더 들여다 보면 속칭 아부라고도 한다. 할 말은 안하고 칭찬만 늘어놓는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간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칭찬도 장소와 때를 가려서 해야 보약이 된다는 진언이다.

그렇다고 칭찬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무게 3톤이 넘는 범고래가 환상적인 점프와 멋진 쇼를 보일 수 있는 것은 고래에 대한 조련사의 긍정적인 태도와 칭찬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긍정적이지 않으면 상대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내가 긍정적이지 않으면 영원히 기다려야 할 지 모른다'고 캔 블랜차드는 이야기 한다. 고래를 춤추게 하는 칭찬의 효과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한다. 올해는 칭찬을 합시다! 자신을! 타인을!

/최재호 경제부 차장 l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鍾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